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1일 국립임실호국원 참배로 임기를 시작했다.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임실호국원 참배로 임기 시작

“사랑받는 의회 만들 것”

도민 바람 실현 의정활동 다짐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1일 국립임실호국원 참배로 임기를 시작했다.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 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 김

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 김희수 교육위원장, 성경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임실호국원에서 헌화, 분향하며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도민의 바람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송 의장은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 도민의 삶을 보듬고 번영하는 전북을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서민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부터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방명록에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고 발전하는 전북을 이끌겠다”고 남겼다. /유호상 기자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 양희재 의원

부의장 - 김종관 의원

6일 상임위원장 선출



양희재 의장

김종관 부의장

남원시의회는 1일 제238회 임시회를 열고 재직의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 신입 의장에 양희재 의원을 부의장에 김종관 의원을 선출했다.

양희재 의장은 당선소감에서 “성원 해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충·효·예의 전통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남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김종관 부의장은 “동료의원들의 성원에 감사하며,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3선의 양희재 의장은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7대 후반기 부의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역시 3선의 김종관 부의장은 제7대 후반기와 제8대 전반기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오는 6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출마 관련 “7일경 제 거취 밝힐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전 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지극 상향대로라면 7일경 제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지구촌보건의료포럼이 주최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어떤 비전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즉 해왔다. 또 하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을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강영병 의심되면 ‘1339’로

한반도 운전자론 ‘재가동’

문 대통령, EU 화상 회담서 “美 대선 전 북미 대화 나두도록 전력 다할 것”
靑 “文대통령 생각 각 측 전달… 공감하고 노력 중”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미 경색 국면을 ‘미국 대선’이라는 시기를 못박아 그 이전까지 직접 뚫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재가동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말한 뒤 “EU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역시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화상 회의 형태로 한·EU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셸 상임의장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정착을 위한 일련의 외교적 과정에 대

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EU는 이에 대한 지지와 북미 대화 재개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5월 보내주신 총선 축하 서한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남북 미 대화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미가 마주 앉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 측에도 전달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통연락사무소 폭발 이후에 청와대와 백악관, 안보실이 긴밀하게 소통했고,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생각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이 됐고, 미국 측도 (북미 정상 만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현재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 ‘일하는 국회법’ 드라이브

“7월 국회 열어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체계·지구심사권을 통해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해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능을 약화시키고 ‘상시국회’를 제도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회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법 보고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 의결해 당론 채택을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종합적인 국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3선의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시켜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해왔다.

우선 법사위의 체계·지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가 담당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를 국회사무처에

둘지, 입법조사처에 둘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또한 상시국회를 제도화했다. 우선 국회 휴회기간을 특정해 종래의 9월 정기국회 외 매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하계 휴회는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동계 휴회는 12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명문화했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차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해 월 2회 본회의 소집을 강제했다. 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소위원회는 월 4회 개최하도록 하고 법안처리 역시 종전 만장일치 원칙에서 다수결제로 바꿨다. 법안소위 복수화, 먼저 들어온 법안부터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도 정립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와 분리해 9월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를 완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시 패널티 부여에도 시동을 걸었다. 우선 본회의 출결 현황을 매 회의 후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공개한 후 국회의장에 보고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출결 현황이 그대로 보고되고 다음 임기 4년 의정활동에 이어진다”며 “의원 입장에서 다음 총선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확실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본회의 불출석 의원의 세비반납에 대해서 “의총에서 언급되긴 했지만 자세한 얘기를 하진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행정·국방 ▲경제 ▲사회 ▲복지·안전 등 4개 분과별 소위원회를 뒤 예 산심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여야 간 갈등으로 개원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기한 내 상임위원장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을 추천해 본회의의 선거로 정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교섭단체 별 상임위원장 수 역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에 따라 산출하는 공식도 정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상임위원장 드래프트’ 규정도 도입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을 의석수 배분에 맞춰 드래프트로 하나씩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약(원내) 1, 2, 3당이 있는데 제2당이 빠진다면 1당과 3당이 먼저 배분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